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4. 6. 11(수)	
	도 자 료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병호과장, 이인자사무관 (Tel. 044-200-2634)
배 포 즉시 사용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박상철 (Tel. 044-200-2726)

“ 이것만은 좀 ! ”...신문고 올리니 규제가 풀리네

-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2개월...건의 5,262건 접수, 940건 수용 -

기초생활수급자인 고교생 A양은 교과서 때문에 여름방학과 봄방학 동안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다.

지자체에서 교과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스템 확인 등으로 3월 이후에 비용이 지급됐고 학교에서는 교과서대를 미리 내야 교과서를 줄 수 있다고 해 매년 그 기간에는 선배들이 버린 교과서를 사용해야만 했다.

A양은 교과서때문에 새 학기마다 마음 졸이는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지난 4월 6일 ‘규제개혁신문고’를 두드렸다.

A양의 규제건의를 전달받은 교육부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2월말에 교과서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지자체에서 비용정산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약 7만 6000명이 학기가 시작될 때 새 교과서를 받아 볼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없이 학업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위한 국민-정부간 ‘소통의 창(窓)’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개혁신문고가 본격 운영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이같은 개선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가 규제개선을 위한 국민-정부간 ‘소통의 창(窓)’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의 규제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홈페이지와 연개해 만들어진 창구로서,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에 새로운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 30일까지 2개월여간 총 7458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일반민원을 제외한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는 5262건으로 집계됐다.

2개월여만에 지난해 접수 건의 15배 접수

규제개선 건의 중 4669건은 각 부처 검토를 완료하고 건의자에게 직접 답변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규제개선 건의 중 약 20.1%*인 940건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 수용되지 않은 중복건의(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주유소 주간거래상황보고제 개선 등) 감안시 수용률은 25.3%

또 2개월여만에 지난해 접수건(300건)의 약 15배가 접수됐으며, 답변실명제 도입과 건의처리에 대한 장·차관 직접 관리로 수용률은 전년(8%, 24/300)대비 2.5배 상승했다.

< 처리 현황 (3.20~5.31) >

접수	규제건의의 (5,262건)					일반민원 (권익위 이첩)
	답변 완료 (4,669건)				검토중	
	즉시수용	중장기	불수용	수용률		
7,458	940	1,291	2,438	20.1%	593	2,196

규제개혁신문고의 건의는 기업집단보다는 일반국민 개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의내용도 주로 국민 및 자영업자 관련 규제에 관한 것이 상당수(규제건의의 약 79%)이다.

< 피규제자별 구분(규제건의의 5,262건 대상) >

대상별	계	국민	자영업자	기업	기타 (국방, 안전 등)
건수	5,262	2,410	1,763	810	279
비중	100	45.8%	33.5%	15.4%	5.3%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등록된 건의 중 수용이 이뤄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940건 중 ▲국민생활 관련 규제개선이 39.4%(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 27.9%(262건) ▲기업 관련 규제개선이 28.9%(272건)를 차지했다.

< 피규제자별 구분(수용건의의 940건 대상) >

대상별	계	국민	자영업자	기업	기타 (국방, 안전 등)
건수	940	370	262	272	36
비중	100	39.4%	27.9%	28.9%	3.8%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의견이 즉시 수용돼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민생활규제 개선 >

① B씨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6학년이 되어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 친구들보다 한 해 늦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걱정돼 규제개혁신문고에 응시연령을 11세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중학교 검정고시(초등학교 졸업학력) 자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을 통해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현행 12세에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② 2주 상해진단을 받은 C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10만원을 지불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인근 다른 병원의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이 이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진단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어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비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병원별로 상이한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③ 최근 인터넷 확산과 국제운송 효율화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가 1조원 규모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나 증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각종 증빙 서류(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목록 등)를 구비해야 한다. 또 구비 서류를 받아 관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개인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자영업자규제 개선 >

④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금이 부족한 D씨는 카드납부를 이용하고 싶어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보험료 납부에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4대 보험료의 경우 현금 납부만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월액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복지부·고용부 등은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 징수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9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E씨는 몇년전 주유소내 공실로 있던 점포에 미용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나타나 세를 줬다. 임차인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신고를 했으나 구청으로 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소 내 부대시설 허가시 소비자의 안전을 이유로 부대시설의 용도·위치·면적에 제한을 뒤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휴게음식점과 대형전자제품 판매점은 허용되지만 미용실 등 다수 업종은 입점이 불가능했다.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은 화재시 대피 등의 이유로 1층에만 영업 허가를 내렸고 면적도 500㎡로 제한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유소 경영적자 해소 등을 위해 하반기부터 이·미용시설 및 운동시설, 피부관리실 등도 주유소 내 입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위치·면적 제한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한 주유업계의 경제적인 이익은 약 150억원으로 추산된다.

⑥ 현재 식품위생법 상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떨어져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과자류·빵류·장류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떨어져 판매하는 경우에도 작업장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소득증대와 불편해소를 위해 떨어져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대상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을 허용하고, 미생물 교차오염 우려가 있는 어육가공품 등만 제외)하고, 단순히 떨어져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작업장, 급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기업규제 개선 >

⑦ 현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생애최초지원의 성격으로서 정책자금 융자(보증) 경험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에서는 더 많은 청년창업자가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총 융자한도 1억원 이내에서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경험자도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⑧ 현재 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광고물 표시방법은 차량의 옆면(창문 부분 제외)의 1/2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기 및 발광 방식의 조명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한시적으로 택시 상부 표시등에 전광류 광고를 표시·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종합적 평가를 통해 전면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⑨ 공공기관 구매입찰시 과도한 실적 및 서류, 증빙자료 등 요구로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의 입찰참가에 제한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명확한 제안요청과 과도한 요구사항을 감소시키도록 했다. 기업들은 종전보다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규제개선 건의’ 사장되지 않게 지속 관리

아울러 해당부처가 불수용한 건의 중 ‘합리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명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별도 검토를 거쳐 소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소명요청에 대해 각 부처는 3개월내에 규제의 존치 사유를 소명하거나, 규제건의를 수용해야 한다. 규제건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창의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현재까지 각 부처에 677건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향후 소명내용에 따라 필요시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중장기 검토로 답변한 건의에 대해서는 6개월 내 수용 여부를 확정해 건의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각 부처에서도 부처 특성에 맞게 규제건의를 창의적으로 처리하며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 수범사례 >

- (산업부) 규제청문회(장·차관)에 상정, 불수용 답변 예비 소명
- (복지부) 신문고 건의자 대상 정기적 간담회 개최
- (농식품부) 장·차관 일일보고, 민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답변 검토
- (국토부) 규제개혁지원단(차관)을 구성, 주요 건의 심층 논의
- (법무부) 주요 건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제작, 답변

갑과 을의 자리바꿈...“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 중요”

규제개혁신문고는 무엇보다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견을 청취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갑과 을의 위치를 바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신문고는 국민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진정성을 갖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건의는 청와대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관 부처로부터 14일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건의들이 수용되어 개선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별도배포 : 1. 「규제신문고 주요 개선사례 80선」 사례집
2. 「규제신문고 처리절차 및 개선사례」 인포그래픽

참고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관련

1. 중장기 검토·불수용 건의 주요 유형

유 형	주요 사례
토지이용 규제 (21.9%)	▶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문화재·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
직역 규제 (14.9%)	▶ 비의료인 문신(타투) 시술 합법화, 의사지도 없이 물리치료사 단독치료 허용, 침구사 제도 부활, 교습소 강사채용 허용
지자체 소관 (13.9%)	▶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한 지자체 조례·규칙 관련 사항 및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영업활동 규제 (12.8%)	▶ 주유소 거래상환 보고주기 변경(월간→주간) 철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제 폐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증명제 폐지 등
안전 규제 (11.3%)	▶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 자동차 검사주기 및 승강기 점검주기 연장 등
조세 관련 (3.1%)	▶ 국세 및 지방세, 관세 등 징수절차 등 개선
기타	▶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철회,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등

2. 부처답변 예시

< 중장기 검토 >

건의	부처 답변
배너·에어풍선 등 유동광고물 합법화	▶ (안행부) 배너·에어풍선간판,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보행자 및 풍수해에 따른 안전문제, 도시경관 저해 등으로 현행 불법광고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계획임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 (산업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12년 초 도입된 제도로써, 입점업체, 농민·납품업체의 피해,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중소기업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 -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당분간 현행대로 의무휴업제도를 시행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불수용 >

유형	부처 답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 (복지부) 의사의 지도를 배제하고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함. 특히, 물리치료 중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의료인의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
승강기 안전검사 주기(월 1회) 완화	▶ (안행부) 승강기 자체점검(월1회)은 관리주체가 상시적인 유지보수 점검이며, 정기검사(연1회)는 전문기관의 검사로서 각각 점검주체, 점검기준 및 항목이 달라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함
주유소 거래상황 보고주기 변경철회	▶ (산업부) 주간단위 거래상황 보고제도는 가짜석유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가짜석유로부터 소비자 신뢰회복과 건전한 석유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며, 석유사업자 상호간의 단순 거래물량 비교·검증만으로도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의 징후 파악이 가능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임 - 다만, 동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기간 운영, 현장교육, 홍보, 알림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하게 보고가 가능도록하고, 전산보고 장비를 지원할 예정

3. 주요 소명대상 건의 유형

유형	주요 사례
반복·다수 건의 (47.3%)	▶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물리치료 규제완화, 주유소 주간 거래상황 보고제 개선 등
실효성 없는 규제 현실화 (19.5%)	▶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타투(문신) 시술행위 허용,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27만원) 규제 완화, 배너·에어풍선 등 유동 광고물 합법화 등
내용적 타당성 재검토 (12.6%)	▶ 농업진흥지역 제도 전반적 재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최장 존속기간 개선 등
절차 간소화 및 중복규제 완화 (6.6%)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인터넷 발급 허용, 산림전공자에 대한 숲해설가 양성과정 일부과목 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간소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귀화절차 신속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8.9%)	▶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인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기사에 대한 과적단속 배제, 중간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공공지가 있는 경우에도 사선제한 배제 등
구체적 개선일정 제시 (2.4%)	▶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일반병원 입지 허용, 녹지설치에 따른 맹지 발생 방지, 문화재 보호구역 제도정비 등
법체계상 문제해결 (1.3%)	▶ 주차장 미설치 불법건축물 합법화에 대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주차장법간 통일, 하우스 내에서의 화훼류 판매에 관한 농지법과 건축법간 통일, 행정규칙인 고시로 규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요건 상향입법 등
중복규제 완화 (1.2%)	▶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일원화, 체온계와 혈압계에 대한 의료기기법과 계량법에 의한 이중규제 해소 등
기타	▶ 농지매입비축사업 대상에 비농민 농지 포함, 개발제한 구역 내 노인복지시설 입지 허용 등

4. 답변 만족도 분석결과

□ **만족도 평가(별5개 만점)가 이뤄진 579건을 분석한 결과, 건의자의 30% 정도가 만족(별4개 이상)**

- **증장기검토·불수용된 건의라도 친절한 응대, 상세한 검토 등으로 높은 만족도를 받은 사례도 일부 있음**

건의자 (건의번호)	소관부처 (검토의견)	만족도	의견
정00 (11980)	해수부 (불수용)	★★★★★	고맙습니다, 우선 전화상으로 친절하시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략) 친절하셨던 박00 사무관님 진정 고맙습니다, 모든 관공서 접근이 항상 어려웠던 저희에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박 사무관님 건강 하시고 항상 건강 하십시오.
유00 (14897)	관세청 (불수용)	★★★★★	이렇게 친절히 전화주고 답변을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며 정부에 신뢰가 갑니다. (중략) 이번 경험, 정부의 친절성과 규제개혁신문고의 대단한 역할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00 (15618)	산업부 (불수용)	★★★★★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중략) 향후 액화석유가스 산업정책 수립시 참고하여 규제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큰 기대를 하면서 답변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00 (14836)	기재부 (증장기검토)	★★★★★	성의 있는 답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은 역시 정부부처에 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5년간 숙성시켜온 상상력의 고뇌들을 한 달이 걸리더라도 잘 정리해서 구체 제안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00 (11423)	복지부 (수용)	★★★★★	이렇게 제가 드린 의견을 수렴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개인 및 가족묘지를 쓴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 개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00 (16835)	안행부 (수용)	★★★★	귀 부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질의에 관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부처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원칙과 불공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한00 (13270)	국토부 (수용)	★★★★★	저의 의견을 수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